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34

2024.10.1.~2024.10.31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상장 중견기업 대표 간담회 (10.23.)

- 이사 충실의무 확대,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합리성을 점검하고,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개최
- 중견기업계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,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밝힘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AI+R&D(기술혁신) 추진전략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(10.17.)

- 'AI+R&D 추진전략'은 ①(AI+기술개발) AI 적용한 기술개발 확산, ②(AI+개방혁신) 전 세계 기술·인재를 AI로 탐색 및 연결, ③(AI+연구행정) 정부 연구개발(R&D) 기획-평가-성과관리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하는 등 3가지 축으로 2030년까지 AI 적용 기술개발 600개 프로젝트 등을 추진
- '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'은 산업데이터 가공 지원으로 기업의 AX를 촉진하고, 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

□ [고용노동부]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(E-9) 규제 개선 (10.17.)

-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(12월 예정)부터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을 경우 외국인력(E-9)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요건 개선
- (예)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뿌리업종 중견기업 대상 (기존)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만 허용 → (개선)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 추가 허용

□ [특허청]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(10.17.)

-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(연 40개 사)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 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할 계획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드스 (10.24.)

-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며,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
-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, 태양광·풍력발전 부품, 핵심 광물 등 포함
- * 배터리, 태양광, 풍력 부품의 경우,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('30년 75%, '31년 50%, '32년 25%)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(10.28.)

- 제조업에 AI를 입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, 생산인구 감소, 탄소 감축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'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'를 본격 추진
- ▲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 선도프로젝트를 '27년 200개까지 확대, ▲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자체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'AI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' 보급, ▲지자체, 산단 등이 보유한 기술·인력·장비·예산 등 인프라 총동원해 AI 확산 속도를 높일 계획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입법동향

1 정부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(10.8.)

-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,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

□ [기획재정부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(10.8.)

- R&D 예타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 및 R&D 추진 규모·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 마련을 위해 ①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, ②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심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음

□ [고용노동부]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10.8.)

-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'일·가정 양립 활성화'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,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,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및 상향 등 정부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음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(10.10.)

- 포집 시설의 신고, 수송사업의 승인,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,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·기술에 대한 인증 절차 및 표시기준 등의 내용을 담음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10.11.)

- ①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, ②평균 매출액 등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(13% → 10%), ③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조정, ④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, ⑤간접비 사용 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(10.18.)

-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,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 인정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(10.24.)

- ①심결례 및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법 위반 해당 행위 예시 추가, ②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요건 정비, ③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경영간접 위법성 판단기준 명확화, ④위법성 판단 시 사업 여건 또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 합리화, 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 개정

2 국회

✓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 의원, 10.16.)

- 주요 에너지의 요금 및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

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 의원, 10.17.)

- ▲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 취업 금지, ▲해외유출 처벌요건 확대(목적범 → 고의범), ▲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의 내용 규정
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 의원, 10.30.)

-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규정

✓ 법제사법위원회

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 의원, 10.2.)

-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 부여

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 의원, 10.16.)

- ▲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 강화, ▲횡령 · 배임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, ▲합병 · 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, ▲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, ▲전자주주총회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 규정

✓ 정무위원회

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 의원, 10.11.)

-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의무화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 의원, 10.24.)

-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악탈적 인수 · 합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

✓ 기획재정위원회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 의원, 10.17.)

- ▲상속 및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%를 할증 평가해 과세하는 현행 제도 폐지, ▲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'네거티브 방식'으로 전환 등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 의원, 10.24.)

-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의무 부과

□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 의원, 10.24.)

-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3년간 연장('23년 → '26년)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걸 의원, 10.25.)

-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(~'27.12.31.)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 의원, 10.30.)

- 기업의 R&D 투자 의욕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 R&D 세액공제율 상향(8% → 15%)

✓ 환경노동위원회

□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 의원, 10.2.)

-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·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

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 의원, 10.4.)

-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

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 의원, 10.4.)

-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

□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 의원, 10.11.)

- ▲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, ▲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 · 외가 여부에 따른 휴가기간 차별 금지, ▲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

□ **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 의원, 10.30.)**

-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

□ **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 의원, 10.30.)**

- 중대재해가 발생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 실시

□ **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 의원, 10.31.)**

- 근로조건의 차별 방지를 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규정

✓ **국토교통위원회**

□ **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 의원, 10.4.)**

-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, 건설현장에서 불법·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,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 부여

□ **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(손명수 의원, 10.29.)**

- ▲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, ▲공제조합에 대한 지도·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 방지 등의 내용 규정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지원사업

□ **[중소벤처기업부] 2025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(10.7.)**

- AI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 예측 등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
-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(수준확인 포함) 중간1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▲(기획지원)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, ▲(구축지원) AI 및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 공장 구축 등을 지원

□ **[중소벤처기업부] 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(10.7.)**
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수준 확인, 로봇 및 공정자동화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기업 모집
-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▲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, ▲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하는 자동화 장비·제어기·센서 등을 구축 지원